

개항기(1899~1906) 群山駐在 日本領事館分館의 설치와 主任書記生의 활동

최보영*

논문접수일: 2019. 10. 30. 심사개시일: 2019. 11. 10. 게재확정일: 2019. 11. 21.

목 차

1. 머리말
 2. 군산 개항과 군산주재
일본영사관분관의 설치
 - 1) 일본의 한국주재 영사관 설치와
군산 개항
 - 2) 군산주재 영사관분관의 설치와
영사분관의 인적구성
 3. 군산거류 일본인의 안정 도모와
군산주재 영사관분관 승격논의
 - 1) 군산 개항장 안정과 일본인
세력확장
 - 2) 군산주재 영사관분관의 영사관
승격 논의와 이사청의 설치
 4. 맺음말
- 참고문헌
<Abstract>

국문초록

본고는 일본이 한국에 설치한 영사관 중 영사분관의 하나인 군산영사분관의 설치와 그 인적구성 그리고 영사분관 주임의 활동에 대해 살펴본 글이다. 1899년 5월 1일 한국정부는 군산항을 조약에 의한 것이 아닌 스스로 개항하였다. 곧이어 일본은 1899년 5월 26일 목포영사관 군산분관을 설치하였다. 군산은 개항 이전 몰래 잠입해 활동하던 일본인이 다수 있을 정도로 일본인에게 매력적이었다.

군산의 근대적 변화는 영사분관에 파견된 주임서기생이 수행한 개항장의 인프라 구축에 의해 이뤄졌다. 군산 영사분관은 다음과 같은 활동을 수행하였다. 첫째,

* 단국대 일본연구소 HK+연구교수, E-mail: 5250607@hanmail.net

러시아의 남하와 관련해 러시아 세력이 군산의 토지를 매입함으로써 세력을 확장하려는 움직임을 포착한 영사분관은 이를 저지하기 위해 이와 관련한 정보를 예의 주시함으로써 가능하면 러시아 세력보다 먼저 토지를 선점함으로써 러시아세력의 진출을 저지하고자 하였다. 둘째, 영사분관 주입은 상권이 넓고 상업상 이익이 집중되어 있던 군산 배후의 시장에서 한국정부의 훈령을 사칭해 독점적 상업행위를 불법적으로 저지르자 이에 대해 적극 대응하였다. 셋째, 한국인의 무장집단에 대한 경계심을 갖고 이들에 대한 정보를 수집해 보고하는 한편 거류민의 안정을 힘썼다.

이러한 영사분관 주입의 활동을 통해 군산은 점차 거류일본인의 수가 증가했을 뿐만 아니라 한국인의 유입도 활발하게 이뤄졌다. 이러한 현상으로 인해 군산은 근대적 도시로 변화·발전했던 것이다. 영사분관 주입은 거류민의 안정적 거주와 활동을 뒷받침하는 핵심권력이었으며 일제의 한국침투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존재였음이 확인된다. 단순히 거류·거주 인구의 증가만으로 도시의 성장과 발전을 짐작하기 보다는 이들의 활동을 가능하게 만들었던 영사의 존재에 더욱 주목해야 할 것이다.

주제어 : 군산, 군산영사분관, 영사, 아사야마 겐조(淺山顯藏), 요코다 사부로(横田三郎), 영사관경찰, 일본인거류지

1. 머리말

1898년 5월 26일, 대한제국 정부는 1899년 5월 1일자로 군산을 개항하기로 결정하고 이를 각국 외교사신에게 통고하였다.¹⁾ 금강하구에 위치한 군산은 대규모 시장인 강경시장을 중심으로 충청남도과 전라북도의 넓은 곡창지대를 배후지로 둔 물류유통의 최적지이다. 일찍부터 이를 간파한 일본은 꾸준히 군산의 개항을 중용했고 재정난에 허덕이던 대한제국정부는 관세수입을 목적으로 군산 개항을 결정하였다. 일본정부는 군산에 목포영사관 군산분관을 설치하고 주입서기생을 파견해 자국민을 보호하고 미곡수출입무역의 증진을 도모하고자 하였다. 1894년 청일전쟁 당시 농업투자를 목적으로 일본인의 침투가 불법적으로 시작된 이래 개항 당시만 하더라도 거류일본인이 20호 77명이었던 군산의 일본인은 개항 이듬해인 1900년에는 131호 422명에 달할 정도로 급격히 증가했다. 그만큼 군산은 일본인들에게 매력적인 투자처였다.²⁾ 군산에는 영사분관이 설치되었기 때문에 영사가 아니라 주입서기생이 분관장의 역할을 담당했다. 군산의 성장과

1) 孫禎睦, 1984, 『韓國開港期 都市變化過程研究』, 一志社, 298쪽

2) 群山府, 1935, 『群山府史』, 18~19쪽

발전에는 영사분관 주임서기생의 활동이 무엇보다 중요한 초석이 되었다. 따라서 군산영사분관의 설치와 주임서기생의 면면을 살펴보는 작업은 당시 일본이 한국에 영사분관을 설치한 목적과 일제의 침략적 진출과정에서 군산의 근대도시 형성과 변화의 의미를 이해하는 데 실마리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

주지하듯이 한국³⁾은 1876년 일본과 朝日修好條規를 체결하였다. 근대적 조약체결로 한국은 안으로는 근대국가를 수립하고 밖으로는 자주국가를 유지해야 하는 역사적 과제를 부여받았다. 하지만 내적으로는 개혁 요구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고, 외적으로는 일본의 침략적 진출을 막아내지 못해 결국 식민지로 전락하고 말았다. 이러한 흐름에 따라 지금까지 개항기 한국의 근대화 과정과 대외관계에 대한 연구는 일본에 의한 한국의 식민지 과정과 그 성격을 해명하는 데 초점을 두어 많은 성과를 거두었다.

특히 개항기 韓·日關係史 연구는 일본의 한국침략과 병탄의 연원을 밝힌다는 점에서 가장 활발하게 이뤄진 분야라 할 수 있다.⁴⁾ 이와 더불어 일본에 의한 폭력적 진출의 거점지로 기능했던 개항장 설치과정이 면밀하게 밝혀질 수 있었다.⁵⁾ 이러한 연구성과는 개항장을 배경으로 활동한 주한일본영사와 공사에 대해 주목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 주었다.⁶⁾ 최근에는 1876년부터 1906년까지 개항기 전체를 아우르는 주한일본영사의 파견과 활동 그리고 이들의 한국인식을 부산영사관에서 평양영사분관까지 한반도 전역에 설치된 열 개의 개항장을

3) 이하 ‘朝鮮’은 편의상 ‘韓國’으로 칭함.

4) 田保橋潔, 1940, 『近代日韓關係の研究』, 朝鮮總督府中樞院; 金義煥, 1966, 『朝鮮對日交涉史研究』, 通文館; 姜在彦, 1970, 『朝鮮近代史研究』, 日本評論社; 森山茂德, 1987, 『近代日韓關係史研究』, 東京大出版部

5) 金義煥, 1963, 『釜山開港の研究』上, 『항도부산』3:1966, 『釜山開港の研究』下, 『항도부산』5:1973, 『釜山近代都市形成史研究』, 研文出版社; 李鉉淙, 1966, 『舊韓末 仁川清國居留地置廢考』, 『동국사학』; 김용욱, 1976, 『韓國開港史』, 서문당; 孫禮睦, 1982, 『韓國開港期 都市社會經濟史研究』, 一志社; 1984, 『韓國開港期 都市變化過程研究』, 一志社; 高秉雲, 1987, 『近代朝鮮租界史の研究』, 雄山閣出版; 홍순권, 2008, 『부산의 도시형성과 일본인들』, 선인; 아이사키코, 2010, 『부산항 일본인 거류지의 설치와 형성』, 『도시연구』3; 박한민, 2014, 『개항장 ‘間行里程’ 운영에 나타난 조일 양국의 인식과 대응』, 『한국사연구』165.

6) 조선에 파견된 일본외교관은 정식으로 공사가 파견되기 이전의 외교관과 공사 그리고 영사로 나누어 볼 수 있다. 角山榮 編著, 1986, 『領事報告の研究』, 同文館; 함동주, 2002, 『근대 초기 일본의 외교체제 수립과 동아시아 정책』, 『梨花史學研究』제29집; 荻野富士夫, 2005, 『日本外務省警察史』, 校倉書房; 한철호, 2005, 『개항기(1880-1906) 역대 주한일본공사의 경력과 한국인식』, 『한국사상사학보』25; 하원호, 2009, 『개항기 재조선일본공관 연구』, 『개항기 재한 외국공관 연구』, 동북아역사재단; 2009, 『한국독립운동의 역사 02, 개항 이후 일제의 침략』 한국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최보영, 2014, 『개항초기(1876~1880) 부산주재 일본관리관의 파견·활동과 그 특징』, 『동국사학』57:2017, 『개항기(1880~1906) 부산주재 일본영사의 파견과 활동』, 『한국근현대사연구』81.

대상으로 다른 연구가 발표되어 주목을 끈다.⁷⁾ 이들 연구를 통해 일본의 개항장 설치·운영의 과정·의도·실태가 규명되었으며 개항장에 파견되어 활동한 영사의 파견목적과 활동 양상 및 대략의 한국인식이 밝혀지는 성과를 얻을 수 있었다.

하지만 개항장 전체와 주한일본영사를 전체적으로 다루다보니 개별 개항장 영사관과 영사들에 대해서 정치하게 분석하지 못하였다. 특히 부산과 인천, 한성 등 대도시 중심의 개항장 연구는 상당히 축적되었으나 영사분관이 설치된 군산·성진·평양 등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소홀히 다뤄져 온 것이 사실이다. 그 중에서도 본 연구가 주목한 군산분관과 이곳을 관장했던 주임서기생을 직접적인 분석대상으로 삼은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다.

군산을 배경으로 진행된 연구는 대개 군산이 개항되는 과정⁸⁾을 비롯해 군산의 무역구조와 무역항으로서의 역할 및 기능⁹⁾ 그리고 해항도시적 성격에 주목한 연구¹⁰⁾가 주류를 이루었다고 할 수 있다. 그 외에 해양경찰의 도입과 감리서 설치¹¹⁾, 거류민단¹²⁾에 대한 형태적 분석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이들 연구를 통해 청일전쟁 이후 일본이 설치한 일본인 거류지의 특징과 형태 및 식민지기 도시의 성장과정이 구체적으로 밝혀졌다. 본 연구는 기존 연구성과를 폭넓게 수용하면서도 개항과 도시형성의 토대를 구축했던 핵심 요인으로 일본의 영사분관의 설치와 주임서기생에 주목하고자 한다. 영사분관의 설치와 영사분관의 장으로 활동한 주임서기생의 면면을 파악함으로써 영사분관의 의

7) 최보영, 2018, 「개항기(1876~1906) 주한일본영사의 활동과 한국인식」, 동국대박사논문.

8) 박준형, 2015, 「청일전쟁 이후 일본인의 평양진출과 평양성 내에서의 ‘잡거’ -일본인 신시가의 형성과정을 중심으로-」, 『비교한국학』 23-3 : 이정옥, 2015, 「제국 일본의 식민지 도시 건설과 전통 사회의 변화」, 『일본연구』 24 : 송석기, 2011, 「근대기 군산의 도시 공간 형성」, 『한국건축역사학회 학술발표대회논문집』 2011-11; 2008, 「개항도시 목포와 군산의 구도심 공간 형성과정 비교」, 『대한건축학회연합논문집』 10-2 : 이성호, 2008, 「식민지 근대도시의 형성과 공간 분화 - 군산시의 사례」, 『살삶문명연구』 1 : 손정목, 1976, 「군산 및 성진의 개항 : 청, 일 전쟁 이후의 도시의 변화(2)」, 『도시문제』 11

9) 김기성, 2016, 「1890년 이후 개항장 미가의 단기변동과 미곡매매 사례」, 『규장각』 49 : 김태웅, 2013, 「개항~일제강점 전기(1899~1933) 군산 지역 搗精業의 추이와 지역적 특징」, 『한국문화』 64 : 최은진, 2011, 「군산미의 대일 수출구조 : -개항(1899년)~1910년대를 중심으로-」, 『역사와현실』 81 : 이현주, 1998, 「개항기 군산항의 유통권 변동과 무역구조」, 『역사연구』 55:56

10) 김두현, 2016, 「1928년 해항도시 군산의 특징과 사회 구조」, 『해항도시문화교섭학』 14 : 김영정, 2006, 「근대 항구도시 군산의 형성과 변화」, 한울아카데미 : 윤정숙, 1985, 「개항장과 근대도시 형성에 관한 역사지리학적 연구 - 군산항을 중심으로-」, 『대한지리학회지』 20-2

11) 노호래, 2011, 「해양경찰사 소고 - 한말 개항장의 감리서와 경무서를 중심으로-」, 『한국경찰연구』 10-2

12) 천지명, 2015, 「일제의 ‘거류민단법’ 제정과 그 성격」, 『한국독립운동사연구』 50 : 구희진, 2014, 「근대개혁기 옥구, 군산항 인근지역의 교육과 사회변화」, 『전북사학』 44 : 김태웅, 2009, 「일제하 군산부에서 주민의 이동사정과 계층분화의 양상」, 『한국민족문화』 35.

미와 특징 및 개항장 군산의 역사적 지위를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초보적인 단계이기는 하나 군산주재 일본영사관 분관의 설치와 이곳에서 활동했던 인물들의 면면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우선 2장에서는 군산 개항과정과 이와 거의 동시에 설치된 군산영사분관의 규모와 인적구성을 고찰하고자 한다. 아울러 군산분관에 파견된 영사분관 주임서기생의 면면과 분관을 구성하고 있던 분관원의 규모를 살펴볼 것이다. 3장에서는 분관주임 서기생의 활동과 역할이 무엇이었는지 파악하고 군산의 근대적 도시 발달에 대해 고찰할 것이다. 근대적 도시로 변화 내지 성장하는 데 필요한 도시 안정화가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시대상황과 함께 살펴보고자 한다. 또 분관이 설치된 군산을 정식 개항장으로 승격하자는 논의를 통해 군산의 발전에 대해서 검토해 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주로 『駐韓日本公使館記録』을 활용하였다.

2. 군산 개항과 군산주재 일본영사관분관의 설치

1) 일본의 한국주재 영사관 설치와 군산 개항

1853년 일본은 미국 페리에 의해 항구의 개방을 강요받고 이듬해 미일화친조약을 체결하였다. 일본의 ‘開港史’에서 최초로 이뤄진 개항이면서 비자발적인 개항이었다. 중국과 마찬가지로 일본의 개항은 미국으로 대표되는 서양의 이질적인 문화와 접촉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질적 문화차이에서 오는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서양에서는 일찍부터 영사제도를 만들어 활용하였다. 일본이 처음으로 서양의 영사를 받아들인 것은 1855년 8월 4일 타운센드 해리스(Townsend Harris)였다. 이후 일본은 영국·프랑스·네덜란드·덴마크·이탈리아 등 서양 국가와 조약을 체결하였다. 통상을 목적으로 동양으로 진출하던 서양은 적극적으로 일본에 상인을 중심으로 하는 자국민의 통상활동을 장려하였고 그들을 보호·관리할 영사를 파견하였다. 일본은 조약에 의거해 이들의 주재를 승인해야 했다.¹³⁾

1876년 2월 일본은 미국이 자신에게 했던 유사한 방식으로 한국을 개항시켰다. 한국과 일본은 조일수호조규를 체결하면서 개항장에 영사를 파견하기로 합의하였다. 일본은 기존 부산의 왜관을 근대적 개항장으로 재설정한 다음 곧

13) 川崎晴朗, 1988, 『幕末の駐日外交官・領事館』, 雄松堂出版, 70~77쪽

도 마스키(近藤眞鋤)를 ‘관리관’으로 파견하였다.¹⁴⁾ 부산을 시작으로 한국은 원산·인천·한성·목포·마산·진남포·군산·성진·평양 등 총 10군데의 개항장·개시장을 설정해 일본을 비롯해 서양 열강에게 개방하였다. 일본은 1876년부터 을사늑약에 의해 한국의 외교권을 박탈하는 1906년까지 약 30년 간 한국에 38명의 영사와 200명이 넘는 영사관원을 파견하였다. 그 중에서 군산분관은 다소 뒤늦은 1899년부터 1906년까지 대략 7년간 운영되었고 4명의 주임서기생과 6명의 영사관원을 파견하였다.

군산은 부산에 비해서는 23년이나 늦게 개항하였고, 군산에는 정식 영사관이 아니라 목포영사관의 분관이 설치되었다. 군산의 개항이 다른 지역보다 늦은 것은 군산이 지리적·경제적·산업적으로 낙후되었다거나 보잘 것 없어서는 아니었다. 그럼에도 일본은 개항 직전 군산에 대해 다음과 같이 표현하였다.

개항 당시 군산은 네댓 개의 작은 언덕 기슭에 몇 개 안되는 조선인 누옥이 점점이 흩어져 있고 내지인의 거주자도 겨우 70여이며, 평지에는 갈대와 억새풀이 무성해서 하릴없는 새들이 노닐며 저녁노을이 창연하고 고깃배의 불빛은 명멸하고 밥 짓는 연기만 쓸쓸한 한가로운 어촌에 지나지 않았다. 무역액 같은 것도 겨우 12,000여 원을 셈할 뿐이다.¹⁵⁾

위의 인용은 일제강점기인 1935년에 간행된 『군산부사』 『총설』의 일부이다. 개항 당시 군산은 몇 안되는 조선인 누옥이 있을 뿐 번성한 이미지는 아니었다는 인상을 전해준다. 이와 더불어 일본인 연구자인 하시야 히로시의 연구를 인용하며,¹⁶⁾ “개항 당시 1899년 군산의 인구가 일본인 20가구 77명, 조선인 150가구 511명, 총 170가구 588명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이러한 묘사가 그다지 과장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는 연구¹⁷⁾ 등을 보면 그동안 군산은 대체로 개항 전까지만 하더라도 빈한한 시골 어촌으로 비취졌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일본의 이러한 표현과 서술은 군산의 전통적 입지조건을 무시하거나

14) 일본이 최초로 조선에 파견한 영사는 ‘관리관’이라는 이름이었는데 이에 대해서는 최보영의 『개항 초기(1876~1880) 부산주재 일본관리관의 파견·활동과 그 특징』(『동국사학』 57, 2014) 참조.

15) 群山府, 1935, 『群山府史』, 1쪽

16) 橋谷弘 저·김제정 역, 2005, 『일본제국주의, 식민지 도시를 건설하다』, 모티브

17) 이성호, 2008, 『식민지 근대도시의 형성과 공간 분화-군산시의 사례』, 『쌀·삼·문명연구』 창간호, 184쪽

군산을 부정적으로 평가함으로써 추후 일본인에 의해 군산이 발전했다는 허구적 인식을 심어주기 위한 전제적 조건일지도 모른다.¹⁸⁾ 실제로 군산은 만조시 수심이 약 17~22미터이고 간조시 7~12미터로 바닥이 진흙이어서 선박의 정박에는 적당했지만 조수간만의 차가 심하고 조수의 흐름이 빨라 무역항으로서 는 좋지 않은 조건을 갖고 있었다. 그렇지만 이와 달리 개항 이전 群山倉을 중심으로 근처의 7읍의 미곡집산지로서 기능한 점과 군산포영을 중심으로 한 군사·통신기지로 기능한 점 마지막으로 조선시대 3대 시장의 하나인 강경과 연결된 하항으로 기능했다는 점을 들어 군산은 금강하구에 위치해 충청·전라의 광활한 곡창지대를 배후로 하는 군사·경제적 요지였다는¹⁹⁾ 사실에 대해서는 거론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군산 앞바다가 가진 해양지리적 요소만 보면 어찌면 일본의 입장에서는 그리 좋은 항구는 아니었을지 모른다. 하지만 당시 군산이 호남지역의 쌀 집산지였다는 점 하나만으로도 충분히 일본에게 매력적인 항구였다. 왜냐하면 일본은 값싼 쌀의 안정적 공급원이 필요했고 그들 스스로가 군산을 ‘三南의 보고’라 불리는 최적의 개항장으로 인식하였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군산은 한국의 3대 시장의 하나로 일컬어지는 강경시장과 가까워 일본 상권의 확대까지도 기대되었던 것이다.²⁰⁾

다만 1894년 갑오개혁으로 대동법이 폐지되어 군산창의 기능이 사라지고 1895년 각도외영병정이 해산돼 조운과 군산포영이 상실되면서 일시적으로 번성함이 사라지기는 하였다.²¹⁾ 그럼에도 군산은 경제적·군사적·지리적 전통과 이점에 의해 언제라도 발전할 가능성이 있는 지역이며 일본인의 저술에 나타나는 왜곡과 축소는 단순히 일본의 점령에 의한 발전임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라는 주장은 적지 않은 설득력이 있다.²²⁾ 왜냐하면 당시 개항장 선정 당시 군산의 역사·지리적 이점을 가장 먼저 파악하고 이의 개항을 한국정부에 중용한 것이 바로 일본인이었으며 한국정부 역시 이러한 점을 인식한 상황에서 군산

18) 비근한 예로 최성환은 목포가 근대적 도시로 변화해 가는 과정을 연구(『목포의 해항성과 개항장 형성과정의 특징』, 『한국민족문화』 39, 2011, 175쪽)하면서 당시 일본인이 목포의 해항적 전통을 부정적으로 묘사한 것은 “자신들이 황무지를 개척하여 목포를 발전시켰다는 주장을 펴기 위한 논리”임을 지적하였는데 이는 군산의 경우도 마찬가지라 할 수 있다.

19) 손정목, 『韓國開港期 都市變化過程研究』, 298쪽 : 윤정숙, 1985, 『개항장과 근대도시 형성에 관한 역사지리적 연구:군산항을 중심으로』, 『대한지리학회지』20-2, 81~83쪽

20) 이현주, 1998, 『개항기 군산항의 유통권 변동과 무역구조』, 『사학연구』 55·56, 569~570쪽

21) 이성호, 『개항장과 근대도시 형성에 관한 역사지리적 연구:군산항을 중심으로』, 82쪽

22) 김중규, 2001, 『군산역사이야기』, 나인, 86~87쪽

을 조약항이 아니라 자개항으로 개항했기 때문이다. 군산이 한촌이었는지 번성촌이었는지는 차치하고라도 개항 전 군산에 이미 일본인 70여 명이 몰래 거주하고 있었다는 사실 자체는 의미가 있다.

군산 개항은 1898년 5월 26일 성진·마산과 함께 議政府會議에서 표결에 붙인 결과, 찬성 7대 반대 3으로 가결되면서 1899년 5월 1일로 정해졌다.²³⁾ 議政府贊政外部大臣 趙秉稷은 상업의 확장과 국민의 이익을 위해²⁴⁾ 이들을 새롭게 개항한다면서 개항 사실을 각국의 외교대표에게 통보하였다. 1897년 목포와 진남포 개항 이래 일본의 개항요구를 받고 있던 한국정부가 스스로 개항하는 형식을 취해 군산과 함께 마산·성진의 개항을 단행된 것이다.

2) 군산주재 영사관분관의 설치와 영사분관의 인적구성

개항과 더불어 일본이 군산에 정식으로 목포영사관 분관을 설치한 것은 1899년 5월 26일이었다.²⁵⁾ 그런데 정식 영사관이 아닌 분관을 설치한 이유는 당시 거류일본인 인구가 소수라는 점과 함께 인접한 지역에 목포영사관이 있고 또 한반도 서해 중심지에 인천영사관이 오랜기간 운영되고 있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표 1>을 보면 개항 당시 거류일본인은 77명으로 한국인의 15% 수준에 불과할 정도로 많지 않았다. 이와 유사하게 부산이 개항할 당시 일본인은 약 80명 수준이었기 때문에 일본은 영사가 아니라 관리관을 파견했었다.²⁶⁾

<표 1>을 보면, 군산 개항 직후 거류일본인은 급격히 증가하였다. 한국인의 숫자도 증가하지만 숫적 증가만으로 양국을 동일하게 보아서는 안되며 일본인의 인구유입율은 청국인과 비교해 보아야 그 특징을 알 수 있다. 기타 외국인은 대부분 청국인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인구의 추이는 거의 변동이 없다. 즉 청국인의 수와 비교해 보면 개항장 내 영사분관의 설치유무가 외국인의 유입에 큰 영향을 끼쳤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통계라 할 수 있다. 이로 인해

23) 『高宗時代史』 4집, 광무 2년 5월 26일조.

24) 『각사등록 근대편』, 『성진·군산·마산항 및 평양 내 시장 확장에 관한 청의』

25) 『駐韓日本公使館記錄』 제13권, 『群山分館 開館에 따른 事務 取扱 通知』. 초대 분관주임 서기생이었던 아사야마가 군산에 착임한 것은 1899년 5월 25일이고 그 다음날 개관해 업무를 취급하기 시작한 것으로 보아 군산분관 개관과 관련해 분관서기생이 착임하기 이전에 이미 준비를 마친 것으로 보인다.

26) 최보영, 2014, 『개항 초기(1876~1880) 부산주재 일본관리관의 파견·활동과 그 특징』, 『동국사학』 57, 496쪽. 당시 부산 거류 일본인의 인구 외에도 ‘영사’라는 근대적 외교제도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던 한국정부의 한계로 인해 영사 파견은 4년 뒤에나 가능하게 된다. 물론 부산은 최초의 개항장이었고 급격한 인구유입으로 인해 정식 영사관으로 승격되어 운영되었다.

〈표 1〉 군산의 일본인·한국인·기타 외국인 인구변동〉

연도	일본인	한국인	기타 외국인	계
1899	77	511	-	588
1900	422	780	24	1,226
1901	472	921	56	1,449
1902	569	1,300	63	1,932
1903	1,225	1,811	78	3,114
1904	1,262	2,113	73	3,448
1905	1,620	3,451	85	5,156
1906	2,050	2,835	96	4,981
1907	2,956	2,903	128	5,987
1908	3,060	1,494	131	4,685
1909	3,220	5,466	96	8,782
1910	3,448	3,830	95	7,373

군산은 개항 당시 각국거류지 즉 공동거류지의 형태로 개항했으나 일본의 전 관거류지로 보아도 무방하다.²⁷⁾ 특히 1902년에서 1903년 사이의 일본인 인구의 증가는 군산지역 미곡 풍년으로 미가가 안정되었던 시기에 이뤄진 것인 만큼²⁸⁾ 시장의 상황이 인구증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당연하다. 같은 기간에 한국인의 수도 비슷하게 증가했다는 사실은 시장 활성화를 통한 이익 추구 관점이 비슷했다는 사실을 유추할 수 있다. 이러한 예는 다음의 거류민 회의 운영과도 관련이 있다.

군산에는 개항 후 紳董公司가 설립되었는데 거류민 대다수가 일본인이었고 설치된 외국영사관도 없었기 때문에 居留地會라고 불렀으며 의장의 자리는 선거도 할 것 없이 항상 주임서기생이 차지하였다. 거류민 선출의 代議員도 중국인은 당초부터 기권했기 때문에 일본인 거류민만의 선거로 한 명의 대의원을 선출하였다. 이 한 사람의 대의원이 의장인 주임서기생과 협의하여 거류지 제반행정을 운용하였으며 그 사무 처리 장소 역시 일본영사관 분관이였다.²⁹⁾ 어쨌든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개항에 의해 설치된 근대적 공공기관은 주로 일본영사를 최상위 권력으로 두고 그 아래 행정기구로 작동했다는 점이다.

한편 한국정부 또한 일본이 군산에 영사분관을 설치함과 동시에 감리서·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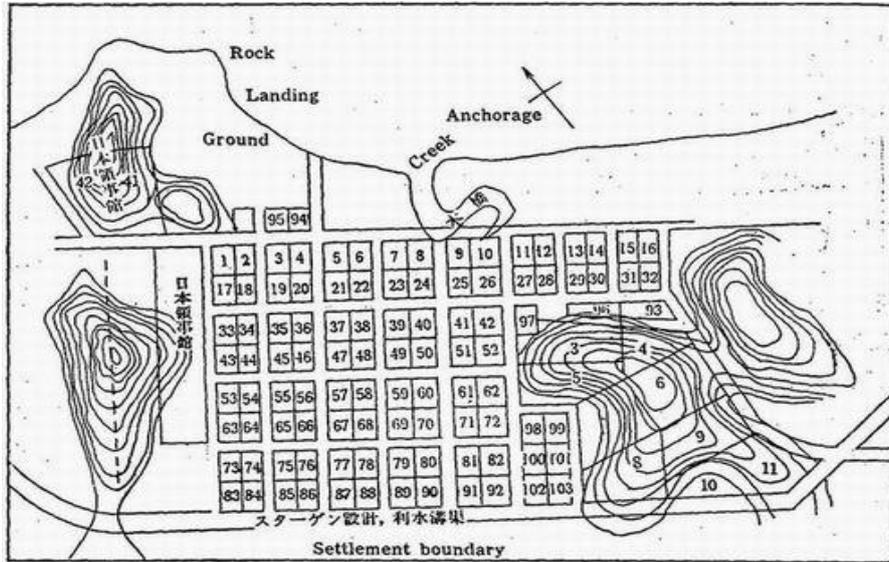
27) 群山府, 1935, 『群山府史』, 11~12쪽

28) 김기성, 2016, 「1890년 이후 개항장 미가의 단기변동과 미곡매매 사례」, 『규장각』 49

29) 群山府, 『群山府史』, 1935, 11~12쪽 : 孫禎睦, 『韓國開港期 都市變化過程研究』, 一志社, 1984, 305쪽

무서·세관·우체사·전신사 등을 설치하였고 한일 모두 이곳에 근대적 기관의 설치와 운영을 통해 군산이 근대도시의 면모를 갖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³⁰⁾ 군산의 근대도시화에 한국정부의 근대적 기구 설치와 운용이 영향을 끼친 것도 적지 않다. 따라서 이 보다도 인구의 급격한 증가와 더불어 수반되어야 했던 일본식 근대 기구의 역할이 더 컸거나 혹은 이 둘의 양상불에 의해 근대 군산이라는 도시가 출현했다고 보는 편이 더 정확할 것이다. 특히 이러한 역할의 정점에 군산분관이 존재했다는 것은 이견이 있을 수 없다. 아울러 이러한 변화 과정에서 전통적인 군산의 모습이 상실된 점도 없지 않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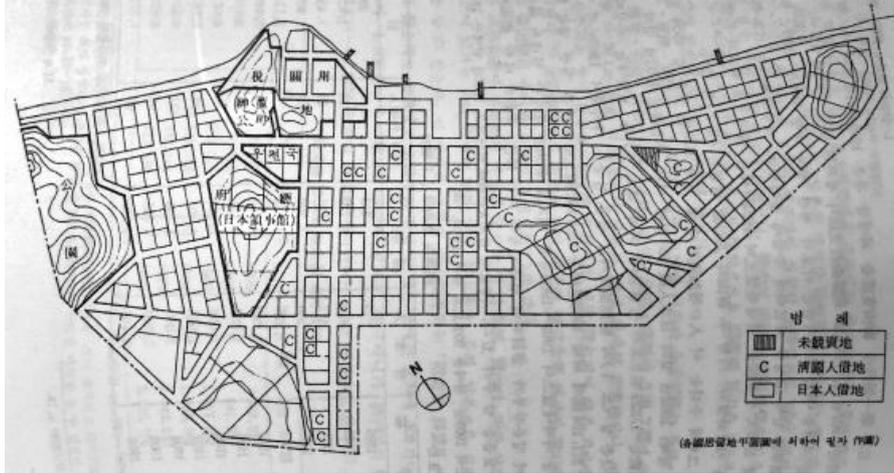
군산의 도시화에서 가장 먼저 이뤄진 것은 측량이였다. 군산분관 주임서기생 아사야마 겐조(淺山顯藏)는 개항장에 설정된 일본인 조계에 대한 정확한 측량을 통해 거점지를 명확히 하고 도랑이나 교량의 설치 등 도시건설을 주도했다.³¹⁾ 측량에 이어진 가옥과 도로의 설계는 주임서기생이 직접 작업한 것은 아니지만 그의 관할 하에 진행되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현재까지 남아있는 옛 군산의 원형이 이 시기에 만들어졌기 때문이다.



〈그림 1〉 군산항경계(『주한일본공사관기록』 14, 「(24) 군산항 각국 거류지 측량의 건」(1900.05.24.))

30) 群山府, 1935, 『群山府史』, 11쪽

31) 『駐韓日本公使館記録』 14, 「居留地 溝渠橋梁設置地區內 一部設計變更에 대한 조회 件」(1900.4.15.) : 『駐韓日本公使館記録』 14, 「群山港 各國 居留地 測量的 件」(1900.5.24.) : 『駐韓日本公使館記録』 15, 「群山港 日本人居留地 測量運行 稟請 件」(1900.8.9.)



<그림 2> 군산각국조계평면도(1911.03.31.) 손정목, 『韓國開港期 都市變化過程研究』 인용

위의 <그림 1>과 <그림 2>는 각각 1900년과 1911년의 군산항 거류지 평면도를 제시한 것이다. 일본거류민의 숫적 증가는 단순히 상업·농업상의 이익을 추구한 무역상 및 지주의 진출로만 볼 것이 아니다. 이들의 진출에 기반이 된 가옥과 도로 및 하수·교량 등의 인프라가 영사분관 주임서기생의 계획과 주도에 의해 이뤄졌다는 사실 역시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림 1>의 양쪽 구릉을 기준으로 왼쪽 구릉에 위치한 영사분관은 ‘42’번에 최초로 위치해 있다가 그 아래쪽으로 옮겨갔고, 영사분관 아래로 각국 거류지 특히 일본인 거류지를 내려다보는 위치에 자리를 잡았다. 일본인거류지는 10년이 채 되지 않는 시기에 77명에서 3,448명으로 급증했고 거류지 역시 <그림 2>처럼 양쪽 구릉 밖으로 확장되었다.

또 일본은 영사관을 개설할 때 영사관경찰도 함께 배치하였다. 군산에도 영사분관이 설치되면서 영사관경찰이 배치되었다. 군산과 비슷한 시기에 설치된 다른 영사관경찰관의 배치현황을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군산 영사관경찰이 처음 설치되었을 때에는 비슷한 시기에 설치된 다른 영사관 및 분관과 마찬가지로 경부 1명과 순사 2명이 배치되었다. 영사분관의 설치와 경찰의 배치 이후 급격히 증가한 인구를 관리하기에 이 규모는 턱없이 부족한 것이었다. 1900년 3월 하야시 곤스케(林權助) 주한공사는 분관 각지의 상황을 고려해 순사의 증원을 요청하였다.³²⁾ 이것을 군산과 같은 분관인 성진과 비교해 보면 1904년 순사의 수가 급격히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 물론 평

32) 『(日本外務省)特殊調査文書』 7, 『新設分館附巡查増員ノ件』, 696쪽

<표 2> 영사관 경찰 배치 현황

관명	설치시기	직명	개설시	1899	1902	1904	1905
마산	1899.05.22	경부	1	1	1	1	1
		순사	2	5	8	6	10
군산	1899.05.31	경부	1	1	1	1	1
		순사	2	2	6	11	12
성진	1899.07.24	경부	1	1	1	1	1
		순사	2	2	5	8	6
평양	1899.08.10	경부	1	1	1	1	1
		순사	2	2	5	15	18

양의 증가폭에 미치지지는 않지만 평양은 군산과 달리 개항장이 아니라 개시장이며 일본인만의 거류지가 따로 존재하지 않았으므로 평양분관의 관할범위가 상대적으로 넓었고 인구도 많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1904년 7월 군산거류 일본인의 증가와 더불어 군산일대의 부동산이 대체로 일본인의 소유화 되고 또 군산이 경부철도 재료의 양륙장이 되어 인근에 주류하는 공사 인부가 4천 명에 달하는 등 혼잡함이 심해지자 군산분관 주임이 순사의 증원을 요청하게 된 것이다³³⁾. 따라서 같은 분관의 경찰 규모로만 보면 군산이 성진보다 크고 중요했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와 더불어 일본은 넓은 관할지역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영사관 경찰 이외에도 각지에 영사관경찰주재소를 설치하였다. 군산영사분관이 설치한 주재소는 강경(1903.01), 전주(1904.09), 공주(1904.09), 신창(1905.04)으로 순차적으로 설치되었다.³⁴⁾ 순사의 파견 수가 급증한 1903년부터 주재소의 설치도 증가한 것이다.

군산분관의 장은 모두 외무서기생 중에서 1명을 주임으로 임명해 책임을 맡았는데 다음 <표 3>에서 보는 것처럼 분관주임 서기생은 모두 4명이 임면되어 파견되었다.

주임서기생 중 가장 먼저 파견된 아사야마 겐조(淺山顯藏)는 1849년 4월 생으로, 1872년 10월 27일부터 이즈하라의 어학소에 재학하면서 한국어를 배웠으며 이후 부산초량으로 건너와 稽古通詞에 선발되었다. 조일수호조규 체결 이후 1878년 3월 하나부사가 대리공사로 재차 한국에 파견되었을 때 生徒가

33) 『駐韓日本公使館記錄』 22, 「강경포주재소에 순사 2명 파출 건」(1904.7.12.)

34) 『(日本外務省)特殊調査文書』 8, 「在韓國帝國領事館警察分署及駐在所調査表」, 699~703쪽

〈표 3〉 群山駐在 領事分館 主任 履歷表

분류	취입년월	관직	이름	재임기간
領事分館	1899년 5월	分館主任 書記生	淺山顯藏	2년 8개월
	1901년 12월	分館主任 書記生	土谷久米藏	1년 1개월
	1902년 12월	分館主任 書記生	橫田三郎	2년 7개월
	1905년 6월	分館主任 書記生	多田桓	9개월

되어 한국과 본격적으로 인연을 맺었다.³⁵⁾ 이후 1882년 임오군란을 만나 당시 外務七等屬으로 하나부사 요시모토 공사와 함께 서울에서 인천으로 피난하였다. 또 2년 뒤인 1884년에는 갑신정변의 한 가운데 있었다. 외무성통역관으로 일본공사관에서 근무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우정국 축하연을 이용해 정변을 일어났을 때 고종은 자신의 보호를 위해 일본공사관에 使者를 보냈는데 그 때 사자를 처음 접한 인물이 아사야마였던 것이다. 그는 다케조에 신이치로 공사와 함께 호위병을 이끌고 왕궁으로 향했다. 하지만 갑신정변은 곧바로 실패했고 아사야마 일행은 또다시 난을 피하지 않으면 안되었다. 다행히 살아남은 아사야마의 고난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1895년 삼국간섭 이후 을미사변에 연루된 것이다. 주지하듯 민비시해사건에 연루된 모든 자들이 모두 면소판결을 받았고 그 또한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처분을 받았다.³⁶⁾ 이처럼 그는 1870년대 중반부터 1900년대 초반까지 한국에서 통역관으로 꾸준히 활동하며 조난을 겪기도 했지만 일본군 傳語官으로 활동³⁷⁾하는 등 한국을 잘 아는 한국통으로 경력을 인정받아 분관주임에 선발된 것으로 판단된다.

이들 서기생들이 어떤 경력과 임명과정을 거쳐 군산에 주재하게 되었는지 관련 자료가 없어 쉽사리 파악할 수 없다. 다만 『직원록』의 한국 내 다른 영사관 관원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아사야마를 제외하고 세 명의 주임이 모두 인천 영사관에서 활동한 적이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아사야마와 같이 가장 오랫동안 군산분관을 주도했던 요코다 사부로(橫田三郎)는 1890년 인천영사관과 1894년 원산영사관에서 서기생으로 활동한 사실³⁸⁾ 만이 확인될 뿐 아직 다른 자료를 찾지 못했지만 그 역시 오랜 기간 한국에서 활동한 한국통에는 확실하다.

35) 『同文彙考』 4, 「公使 一」, 4145쪽

36) 田阪正則, 2010, 「公文書による韓語學所出身者たちのその後」, 『日語日文學研究』 73-2, 415~418쪽

37) 『고종시대사』 3권, 고종31년 7월 23일

38) 國立公文書館 所藏 內閣文書, 『職員錄』(1890)

다음으로 타다(多田桓)은 육군성 유학생 출신으로 1894년 청일전쟁 당시 한국정부에 고용되어,³⁹⁾ 1899년부터 1905년까지 인천영사관 외무통역생으로 활동하다가⁴⁰⁾ 분관주임이 된 경우이다. 그 역시 아사야마와 같은 쓰시마 한어학소에서 도쿄외국어학교에 입학해 한국어를 배운 것으로 보인다.⁴¹⁾

쓰치야(土谷久米藏)는 1900년 인천영사관에서 외무서기생으로 활동하였다.⁴²⁾ 이후 1910년 경 쓰치야는 중국 쓰부(芝罘)에서 副領事로 활동하였다.⁴³⁾ 1911년 7월 11일 『관보』에는 후저우[福州] 부영사로 임명된 기사가 있는 것으로 보아 주로 중국에서 외교관으로 활동한 것으로 판단된다.

위의 외무서기생을 주임으로 하는 군산영사분관은 대체로 분관주임을 정점에 두고 그 아래 외무서기생과 외무통역생을 두었으며 영사관경찰의 경부와 순사로 구성되어 있다. 연도별 조직구성과 구성원을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4〉 在群山領事分館 조직구성

연도	분관주임	외무서기생	외무통역생	경부	계
1900	淺山顯藏	喜田龜太郎		八田朝之助	3
1901	淺山顯藏	安東源治郎		八田朝之助	3
1902	土谷久米藏		蓮元康丸	八田朝之助	3
1903	橫田三郎	成島朝一	蓮元康丸	八田朝之助	4
1904	橫田三郎	成島朝一	蓮元康丸	八田朝之助	4
1905	橫田三郎	成島朝一	蓮元康丸	八田朝之助 愛甲卯八郎	5

군산영사분관이 개관했을 때에는 분관주임, 외무서기생 2명과 경부 1명이었고 이는 다른 분관도 마찬가지로 규모였다. 그런데 거류일본인의 수가 500명을 상회하는 1903년에는 외무서기생 주임 1명과 외무서기생 1명 그리고 외무통역생 1명과 경부 1명으로 총원이 3명에서 4명으로 늘어나고 1905년에는 경부 1명을 추가하여 총원이 5명이 된다. 두 배 넘는 폭발적 인구증가가 영사분관의 업무를 증폭시켰음은 충분히 예상가능하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일본은 새롭게 전문 통역생을 두었고 추가로 경부를 배치함으로써 한국인과 관계뿐만

39) 『駐韓日本公使館記錄』 24, 「理事廳 增置에 관한 건」(날짜미상)

40) 國立公文書館 所藏 內閣文書, 『職員錄』(1899~1905)

41) 田阪正則, 「公文書による韓語學所出身者たちのその後」, 411쪽, 각주 11번

42) 國立公文書館 所藏 內閣文書, 『職員錄』(1900)

43) 『韓國近代史資料集成』 3권 3권 要視察韓國人舉動 3 > 九. 要視察外國人ノ舉動關係雜纂 韓國人ノ部 (九) > (65) 在留韓人ニ關スル事項取調之件 [芝罘 在留 韓國人の 調査]

아니라 자국민 보호에 더욱 적극적으로 임하고자 했던 것으로 보인다.⁴⁴⁾ 이처럼 군산은 일제에 의한 독점적 무역이 증가하면서 인천항과 유사한 무역항으로서 변화할 수 있었다. 일본은 군산항을 원활하게 관리·통제하던 영사분관의 능동적이고 주도적 활동을 통해 한국의 물자를 용이하게 수탈할 수 있었던 만큼 이들의 존재는 일본으로서는 중요했다고 생각한다.

3. 군산거류 일본인의 안정 도모와 군산주재 영사관분관 승격논의

1) 군산 개항장 안정과 일본인 세력확장

군산이 개항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분관주임 아사야마 겐조에게 러시아의 움직임이 포착되었다. 1899년 11월 15일 《朝鮮新報》에 러시아가 군산에서 토지매수를 크게 계획한다는 보도가 있었던 것이다. 그는 군산으로 부임한 이후 군산 내 일본인의 세력확장을 위해 분주하던 차에 이러한 보도를 접한 것이다. 러시아가 부동항 개척과 한반도 경영에 주력한 것은 한두 해의 일이 아니었다. 하지만 대체로 러시아의 남진은 한반도 동해안을 대상으로 진행되었고 그 목적 또한 군사적 이유로 알고 있었다. 그런데 군산은 다소 의아한 지역이었던 것이다. 아사야마는 당시 러시아가 마산과 목포 등 개항장 부근의 토지매수에 주력하고 있다는 소문은 접하고 있었지만 군산은 러시아의 남진 목적에 그리 매력적인 항구는 아니었다고 판단하였다. 왜냐하면 그의 생각에 군산은 “항구가 불량하여 50~60리 밖의 앞바다가 아니면 군함을 정박하기 어렵기 때문에 군사상 또는 정략상 요지도 아닌” 항구였기 때문이다.⁴⁵⁾

그럼에도 아사야마는 《朝鮮新報》의 기사에 주의해 한국의 군산감리인 趙性協에게 만일 러시아 세력이 군산지역의 토지를 매입하려는 움직임이 있으면 통보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얼마 후 조성협은 “어떤 한인이 내항하여 거류지 부근의 토지를 거의 전부 매수할 것 같은 모양인데 그 한인은 러시아 공사관에 출입하는 자”라고 하였다는 것이다. 그래서 아사야마는 토지매수는 곧 러시아의 계획이 틀림없을 것으로 보고 토지매수자의 신상에 대한 정보를 요청하였다. 이에 따라 조성협은 토지를 매수하려는 한인은 성은 ‘김’이라고 알려 주고 해망정 뒤뜰을 6,800원으로 정하고 京浦의 老鼠山과 그 산 밑의 전답도

44) 國立公文書館 所藏 內閣文書, 『職員錄』(1900~1906)

45) 『駐韓日本公使館記錄』 14, 『露國의 當港에 대한 計畫風聞內報의 件』(1899.12.9.)

7,000원으로 정했다고 알려주었다. 아사야마는 우선 조성협에게 일본인 중에서도 그 토지를 매입할 의사가 있으므로 잠시 한인의 매매를 중지시켜 줄 것을 부탁하였다. 그런데 아사야마는 감리 조성협이 종래에 토지 매매에 관여해 이익을 얻으려는 수작이 있었던 인물임을 간파하고 어찌면 이번의 토지 매매가 러시아의 계획을 운운하며 거짓으로 속여 일본인에게 고가로 팔아넘김으로써 이익을 보려는 것이 아닌지 의심하였다. 그래서 아사야마는 별도로 ‘김’이라는 인물에 대해 조사를 시킨바 ‘김’은 “金永元으로 서울 종로에서 수월루라는 요리집을 경영하는 자산가로 민병석이라는 인물과 교류하는데 이번에 군산을 내향한 목적은 충청도 17개 군의 납세를 정부에 전납해 주었기 때문에 이곳에서 그 금액을 징수함으로써 미곡을 매입하기 위함”이라는 것이 밝혀졌다.⁴⁶⁾

그런데 어찌된 이유인지 김영원에 의한 토지매매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한 달이 지났을 때 조성협이 재차 아사야마에게 위의 언급한 토지가 곧 매매될 것으로 보이므로 일본인 중에 매입하려는 자가 있으면 꼭 이번 기회에 진행시키라는 말을 전해왔다. 아사야마는 우선 일본인에게 권유할 것이니 5~6일 사이에는 매매가 이뤄지지 않도록 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그러면서도 그는 이 토지매매가 매우 의심스럽다면 이와 관련하여 더 자세히 조사해 보았다. 그 결과 애매하긴 하지만 러시아인이 관련된 모양은 전혀 보이지 않았다. 그럼에도 조성협 감리의 말만으로는 판단하기 곤란함을 느꼈다. 그의 생각에 군산은 군사상으로 중요한 땅이라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선 토지매매는 진행할 수 없음을 조성협 감리에게 전하였다. 그러면서도 만약 이번의 토지매매가 러시아와 관련된 것일지도 모르므로 이에 대한 대책을 요청하는 서신을 아마자 엔지로(山座門次郎) 한성공사에게 청훈하였을 뿐이다.⁴⁷⁾

이후 아사야마는 이와 관련한 사항을 공사 내지 본국 외무성에게 보고한 적이 없다. 또 러시아가 군산항의 토지를 구입해 군사적 목적으로 사용하였다는 역사적 사실이 전해지지 않는다. 이를 종합해 볼 때 이 문제는 아사야마의 짐작대로 감리 조성협이 영사분관 주임을 상대로 사기행각을 벌이려던 것이 아니었을까 짐작해 본다. 물론 아사야마가 감리의 사기에 걸려들고 말고는 중요한 문제는 아니다. 이 문제는 군산분관 주임이 군산이 가진 지리적 특징을 상당히 잘 이해하고 있다는 점과 러시아와 일본의 관계를 유념하면서 러시아의

46) 『駐韓日本公使館記錄』 14, 「露國의 當港에 대한 計畫風聞內報의 件」(1899.12.9.)

47) 『駐韓日本公使館記錄』 14, 「露國의 當港附近地所 買入에 관한 風聞續報의 件」(1900.1.9.). 아마자는 후에 1905년 일본이 독도를 자국영토로 편입할 때 외무성 정무국장으로서 결정적 역할을 한 인물로 잘 알려져 있다.

토지구입이 갖는 의미를 정치적·군사적으로 파악함으로써 군산 내 일본인 세력의 유지 내지 안정을 도모하고 있었다는 점을 알 수 있는 측면에서 상당히 의미있는 사실이다.

또 군산분관 주임서기생 아사야마는 1900년 8월 경 충청도 은진군 강경·논산·노성 등에서 방적사·옥양목·면포·석유에 대한 ‘독점매매회사’가 설립되었다는 사실을 접하고 이에 대한 대책마련에 부심하였다. 그는 우선 강경에 주재하는 인천영사관 소속 이시도 나카하치(石堂仲八)의 보고와 분관에서 직접 조사한 내용 그리고 궁내부장정을 확인하여 ‘독점매매회사’의 존재를 확인하였다.

인천영사관 소속 강경주재 순사 이시도는 논산시장에서 활동하는 전매회사에 대해 출장조사를 한 결과, 전매회사가 석유, 방적사, 철을 독점하고 있었으며 그 중 석유는 소매에까지 세금을 매기고 방적사와 철은 독점판매점을 설치해 다른 상인의 거래를 방해하고 만약 매매하는 자가 있으면 차압하고 엄벌에 처한다고 공표하고 있다는 사실을 파악하였다. 이들의 행패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거래를 금지한다는 이유로 일본인의 주택까지 난입하는 등 일본상인의 피해가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었다. 이에 따라 이시도는 독점회사의 공문을 소지했다는 李伯述이라는 자를 찾아내 조사하였다. 그때 그는 궁내부장정과 지방장관의 훈령을 제시하며 자신은 이 훈령에 따라 “當市場(논산시장-필자)에서는 국적을 불문하고 지정된 상품은 일체 출품할 수 없다”고 하였다. 이시도는 이백술의 활동은 엄연히 일본인의 행상권을 침해하는 일이라고 단정하고 군산영사분관에 사건의 처분을 요구하는 보고서를 제출하였다.

아사야마는 곧바로 군산 감리와 면담해 4품 전매회사는 상인의 자유 매매를 방해하고 중과세 혹은 이와 비슷한 간사한 수법으로 상업활동을 제압·강탈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이를 행하는 불법자를 단속해 자유무역의 취지를 지켜달라고 요청하였다. 하지만 감리는 “이 일은 원래 관찰사가 궁내부의 명을 받아 시행한 일이므로 감리로서는 직권이 미치지 않아 어찌할 수 없는 일”이라며 아사야마의 요청을 거절하였다. 이에 따라 아사야마는 교섭을 중지하고 특명전권공사 하야시 곤스케(林權助)에게 적절한 조치를 취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⁴⁸⁾

그런데 얼마 뒤 독점회사를 운영하던 이백술이 갑자기 공주관찰사의 소환을 받아 구인되면서 그의 독점회사는 자연스럽게 소멸 내지 해체되었다. 이에 대해 아사야마는 “현재 시장도 평소 상태로 돌아가 상인 일동은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하고 있다”며 일본인의 안위를 보고하였다.⁴⁹⁾ 결국 이 문제는 아사야마가

48) 『駐韓日本公使館記錄』 15, 『獨占賣買會社 撤廢에 대한 稟請의 件』(1900.8.29.)

49) 『駐韓日本公使館記錄』 15, 『獨占賣買會社 撤廢에 관한 件』(1900.9.16.)

하야시에게 한 독점회사의 철폐요구와 상관없이 이 회사가 사라져 버림으로써 거류일본인의 생활이 다시 안정을 되찾게 되면서 해결되었다. 그런데 한국인의 독점회사가 한국정부의 승인에 의한 것 즉 궁내부의 外劃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이백술의 사기행각이었던 것인지에 대해서는 의구심이 남지만 이를 뒷받침해주는 추가 자료는 발견되지 않는다. 그런데 분관주임이 하야시에게 한 요청은 어떻게 되었는지 궁금하다. 위의 독점회사 문제에 대한 분관주임의 요청과 똑같은 문제는 아니지만 또다시 비슷한 독점회사의 출현을 통해 다소 해결될 것 같다.

1900년 10월 3일자 군산영사분관 주임 아사야마의 조회문에 따르면 이름을 알 수 없는 한국인이 “또 궁내부령으로 공공연히 寧康社라는 회사를 설립하여 내외인을 불문하고 각종 사용품에 대해 모든 주인에게 세금을 징수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위의 이백술과 비슷하게 전주관찰사의 허가를 얻어 방적사·석유 등을 매매하며 세금을 징수한 것이다. 이에 거류일본인은 또다시 영업상의 손해가 발생하였고 아사야마는 이에 대해 재차 하야시 공사에게 세금징수를 철폐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⁵⁰⁾

이에 대해 하야시 공사는 이 문제를 외부대신 박제순에게 조회하였다. 즉 하야시 공사는 군산에서 벌어지는 상업상의 문제를 중요하게 생각해 빠뜨리지 않고 한국의 외부대신에게 문제를 제기한 것이다. 하야시는 “군산에서 궁내부의 명령으로 공공영강회사를 설립하고 내외국인을 불문하고 세를 징수하는 것은 조약을 위반하는 것”이라며 “이는 간교한 무리가 함부로 사칭한 일에 불과할 것이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들을(필자) 체포하여 엄중히 징계”하길 바란다 고 압박하였다. 이에 대해 박제순은 궁내부와 전주관찰사에게 하야시가 제기한 문제에 대해 훈령을 보냈다. 이 훈령을 접한 궁내부는 “공주와 은진 등지의 징세는 이미 혁파”했다면서도 “영강회사에 대해서는 본래 허가한 일이 없으니 엄중히 조사하여 금지”해야 한다며 “현재 전화로 전주관찰사와 감리에게 명해 각별히 조사하여 처리”토록 하였고 보고 받았다. 또 전주관찰사는 “방사와 석유 등에 대한 세목은 현재 징수하는 일이 없다”고 하였다.⁵¹⁾ 이후 이와 관련한 왕복문서가 더 이상 보이지 않는 것으로 보아 이 문제는 재차 제기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이처럼 군산영사분관의 관할권은 군산에만 한정된 것이 아니었다. 군산분관의 주임서기생은 강경·논산 등 대규모 시장을 배경으로 한국인이 중앙정부를 사칭해 벌인 징세와 독점회사 운영이 조약에 위

50) 『駐韓日本公使館記錄』 15, 『寧康社 設置에 관한 件』(1900.10.3.)

51) 『駐韓日本公使館記錄』 15, 『公州·群山 등 徵稅 革罷 狀況 照覆』(1900.10.18.)

배되는 사건임을 간파하고 이를 공사에게 전달해 빨리 대처케 함으로써 자국민의 상업상 이익을 보호하고자 한 것이다.

군산영사분관의 거류일본인 보호활동은 일상적 거류와 상업행위에만 국한되지 않고 이 시기 특징적으로 발생했던 한국인의 무장봉기와 반일투쟁에 대응하며 적극적으로 나타났다. 군산영사분관 설치 이후 한국인의 집단적인 무장활동이 나타난 것은 1900년에 형성·활동한 활빈당이였다. 1900년 말 전라도 정읍과 남원 그리고 각 지역에서 활빈당이 횡행하자 군산분관 주임은 이들의 상황을 조사·보고할 것을 하달한다. 그런데 이 지역에 대한 정보가 거의 없던 당시만 하더라도 일본인들은 활빈당과 동학당조차 분간하지 못했다. 현지 조사를 담당한 군산분관 순사는 지역의 군수에게 들은 바대로 활빈당을 ‘진정한 도적’으로, 동학당은 ‘정부에 대해 청원하는 것을 명분으로 모인 자’로 구분할 뿐이었다. 활빈당이든 동학당이든 일본인에게는 모두 위협적인 존재들이었고 군산분관 주임은 이들에 대한 꾸준한 정보수집을 수행하고 또 이를 공사에게 보고하였다.⁵²⁾

이 외에도 일진회의 지방 지회격인 진보회의 활동 무대로 군산분관 관할이 포함되어 있었다. 군산분관 주임은 이들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한국인과 일본인 정보원들을 각지에 파견하여 진보회의 움직임을 파악하고 이를 공사와 본국에 보고하였다. 하지만 이들은 진보회의 활동과 성격을 정확히 파악하기에는 무리가 있었고 진보회가 지향하는 바에 대해서도 이해하지 못했던 것 같다.⁵³⁾

1904년 2월 8일, 일본의 선제공격으로 러일전쟁이 일어났다. 전쟁은 모든 사회의 인적·물적 환경에 영향을 끼치는 거대한 파도와 같다. 전장을 달리하는 러일전쟁의 파도가 군산에도 몰아치는 건 어찌면 당연한 일일 것이다. 군산분관 주임서기생 요코다 사부로(横田三郎)는 러일전쟁이 발발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러일전쟁이 통상항해에 미친 영향’이라는 조사보고서를 제출하였다.⁵⁴⁾ 그는 러일전쟁이 군산항에서 주로 담당하는 미가에 영향을 끼친다고 보았다. 러일 양국의 긴장관계가 계속되면서 오사카 연안의 각 항구에서 쌀값이 등귀하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쌀 공급지인 군산항의 쌀값 역시 높게 올랐다고 하면서 10엔에 미치지 못했던 현미 가격이 10엔 6~70전까지 올랐다고 하였다. 이 외에도 가마니·석유·금건 및 방적사·일용품 및 음식료·임금기선운임·韓貨·항해·

52) 『駐韓日本公使館記錄』 15, 『江景地方 活貧黨 情況報告 件』(1900.9.10.) : 『駐韓日本公使館記錄』 15, 『전라북도 活貧黨의 情況 視察 調査 復命書 進達 件』(1900.10.30.)

53) 당시 영사분관에서 진보회에 대한 정확한 이해 혹은 파악이 어떻게 이뤄졌는가에 대해서는 추후의 연구과제로 삼고자 한다.

54) 『日露戰爭ノ通商航海ニ及ホセル影響調査一件 第二卷』(일본 아시아역사자료센터 소장, 청구기호 ref. B11100060000 : 외무성 외교사료관 소장, 청구기호 B-3-4-2-34_002

금융·재류일본인의 이동 등에 대해 짚막하게 2월 15일·3월 2일·3월 16일 총 세 차례 보고하였다.

이 외에도 군산분관 주임서기생은 영사의 가장 막강한 행정권한 중의 하나인 재류금지 조치를 집행하였다. 그는 개항장 질서를 흐트러뜨리는 일본인을 군산에서 퇴거조치 시킴으로써 거류지의 안정을 도모하였다.⁵⁵⁾

2) 군산주재 영사관분관의 영사관 승격 논의와 이사청의 설치

군산과 더불어 분관으로 개관한 평양은 설치된 지 3년이 채 지나지 않은 시점인 1902년 2월에 영사관으로 승격할 필요가 있다는 하야시 공사의 의견이 제출되었다. 평양은 한국에 설치한 3개의 영사분관 중에서 “서북부에 위치한 도회지로 경성 다음의 우수한 시장”이고, 요동과 한국 사이의 거래가 주로 평양상인에 의해 이뤄져 왔는데 증남포와 평양의 개방으로 평양의 상인은 오히려 의주를 능가해 그 상업의 요동으로 확장하는 등 상업 상 가장 유망한 곳일 뿐만 아니라 압록강을 접한 러시아의 만주 경영과 관련해 크게 주목해야 할 지역으로 설정되었다. 더욱이 평양은 한국정부로부터 관찰사를 파견하고 있는 지역인데 반해 일본은 분관을 두어 관입관을 파견하는 것은 한국관료와 자격상 형평성을 잃게 되어 일을 진행시키는 데에 불편함이 크다는 이유로 평양을 영사분관에서 영사관으로 승격할 필요가 있다는 요구가 제기된 것이다.⁵⁶⁾ 영사분관이 영사관으로 승격되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바로 상업상의 이익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시기만 하더라도 군산과 성진은 평양에 비해 상업상의 이익이 적었고 경비가 허락하는 한 현 상태로 유지해도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본 것이다.

그런데 군산분관을 군산영사관으로 승격해 줄 것을 요청한 것은 평양의 영사승격 요구가 제기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다. 군산은 개항장 설치 전후부터 거류지 측량의 정확화⁵⁷⁾와 군산항 축항 공사⁵⁸⁾를 통해 개항장의 확대와 근대적 도시화를 순조롭게 진행시키고 있었다. 이를 통해 거류지 안정화와 거류인구의 급증 및 상업상의 이익이 극대화 되면서 군산분관에 대한 영사관 승격

55) 『駐韓日本公使館記錄』 20, 『군산 재류 일본인 宮崎 등 재류금지조치에 관한 건』(1903.3.31.)

56) 『駐韓日本公使館記錄』 18, 『평양에 영사관을 설치하는 데 관한 상신』(1902.2.10.)

57) 『駐韓日本公使館記錄』 15, 『居留地 測量 및 設計에 대한 件』(1900.4.14.) : 『駐韓日本公使館記錄』 14, 『居留地 溝渠橋梁設置地區 內 一部設計變更에 대한 조회 件』(1900.4.15.) : 『駐韓日本公使館記錄』 14, 『群山港 各國 居留地 測量의 件』(1900.5.24.) : 『駐韓日本公使館記錄』 15, 『군산항 일본인거류지 測量運行 稟請 件』(1900.8.9.)

58) 『駐韓日本公使館記錄』 20, 『群山港 築工에 관한 건』(1903.1.26.)

논의가 제기되었다.

1903년 4월 하야시 공사는 군산항에 대한 일본정부의 조사를 촉구하였다. 하야시는 1902년 이래 군산이 현저하게 발전하고 있고 장래에도 꾸준한 진보가 예상된다고 하면서 군산항에 대한 충분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역설한 것이다. 이는 평양에 대한 승격조치가 미처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평양과 함께 승격을 추진해야 하는 합당한 이유가 있다고 본 것이다. 하야시는 평양의 영사관 승격을 통해 한반도 남부에만 치우쳐 있는 일본 세력을 한반도 서북부 방면으로 부식할 것을 꾀하는 한편, 군산을 통해서는 다음과 같은 이익이 있다고 보았다. 첫째, 군산은 충청·전라의 분계선으로 흐르는 금강의 하구에 있어서 토지가 기름지고 넓다. 둘째, 한국의 富賈라 할 수 있는 충청남도와 전라북도의 발달된 시장이 상업권 내에 있다. 셋째, 군산은 일본의 鹽業 구획 내 서해안 극단지에 있으므로 군산의 발전은 일본의 어업자에게 적지 않은 편의를 준다.

그럼에도 지금까지 군산을 분관으로 유지하고 있었던 것은 주임자의 지위가 낮았고 적임자를 찾기 어려웠으며 재판권을 행사하지 못했기 때문에 지방에서 위신을 얻기 어려웠기 때문이라는 것이다.⁵⁹⁾ 따라서 분관을 유지하는 것은 직접적으로는 상업상의 발달에 부정적 영향을 줄 것이고 간접적으로는 일본세력의 부식에도 좋지 않으므로 군산분관을 영사관으로 승격함으로써⁶⁰⁾ 일본인의 상업 발달과 일본세력을 부식시켜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군산이 일본인의 한국 내 침투에서 중요한 거점으로 성장했음을 의미한다.

하야시 주한공사의 군산 승격 요청에 대해 고무라 주타로 외무대신은 평양과 아울러 군산의 영사관 승격은 별도로 조사할 필요없이 인정한다고 회신하였다. 그러면서도 이를 주저할 수밖에 없는 것은 경비상의 문제가 있다고 토로하자 하야시는 영사관승격은 분관주임에게 영사재판권을 부여해 한국의 지방관과 같은 지위로 끌어올리는 것으로 어느 정도 가능하므로 경비상으로는 현저한 증가가 없다고 반문하였다. 아울러 경비문제를 해결할 방도가 있다면 군산과 평양의 영사관승격을 추진해 줄 것을 덧붙였다.⁶¹⁾

군산분관의 승격문제가 더 이상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1904년 2월 러일전쟁이 발발하면서 한반도는 전쟁의 영향을 강하게 받게 된다. 임오군

59) 개항기 영사관은 영사재판권을 갖고 재판관할권을 행사하는 주체였다는 사실은 잘 알려져 있다. 하지만 영사분관의 재판관할권에 대해서는 아직 연구된 바 없다. 군산을 포함해 성진과 평양의 영사분관의 영사재판에 대해서는 추후 연구과제로 삼고자 한다.

60) 『駐韓日本公使館記錄』 20, 『板田 參事官 조사사항의 변경에 관한 건』(1903.4.11.)

61) 『駐韓日本公使館記錄』 20, 『평양 및 군산을 독립영사관으로 하고 싶은 건』(1903.5.19.) : 『駐韓日本公使館記錄』 22, 『한국 내 제국영사관 분관을 영사관으로 하는 것에 대해』(1904.9.16.)

란·갑신정변·청일전쟁 등 격동기 한국주재 영사들은 각지의 거류민을 안정시키는 데 앞장서며 일본 외무성과 주한일본공사의 지휘에 따라 일사분란하게 움직였다. 하지만 불안한 정국에서 자국민 안정만을 추구했던 기존 대처와 달리 러일전쟁기에 영사관과 영사분관은 “한국을 존중하며 한국인과 외국인의 생명과 재산의 안정 유지를 위해 충분히 주의를 기울일 것”이며, 특히 일본인은 그 행동을 신중히하고 여러 일들에 대해 관할 관청의 지휘를 받을 것을 유달하면서 한국인에 대해서도 영향력을 발휘하려고 했다는 점이다. 이 유달문을 일본어 외에도 한국어로 신문에 게재 또는 거류지 안팎에 게시함으로써 한국인에게도 영사의 활동을 선전한 것이다.⁶²⁾ 나아가 이러한 유달 외에도 “일본 관청은 항상 공평하게 사무를 처리하므로 한국 신민은 더욱 안심하고 업무에 종사하고 만약 일본인의 불법행위에 의해 신체나 재산에 손해를 입은 자가 있다면 곧바로 상세한 사실을 갖추어 일본 관리에게 호소”할 것을 ‘한글로’ 고시하였다.⁶³⁾

1903년 초부터 제기된 군산분관의 영사관 승격문제는 1904년 2월 러일전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제대로 논의되지 못하고 결국 1905년 11월 을사늑약이 체결되면서 빛을 보지 못하고 중단되었다. 을사늑약에 의해 한국의 외교권이 박탈당하면서 주한일본영사관이 폐지되었기 때문이다. 일본은 을사늑약을 근거로 이듬해 1906년 2월 통감부를 설치하고 지방에 이사청을 설치하기 시작하였다. 이사청은 기존 영사관과 영사분관을 계승하는 것으로 설치되었다. 일본은 이사청을 설치하기 위한 준비과정에서 서울을 비롯한 부산·인천·원산·진남포·목포·마산 등 7개의 영사를 이사관으로 삼고 군산·평양·성진 등 3개의 분관주임은 종전과 같은 분관 체제 하에 둬으로써 당분간 영사분관이 독립하여 이사관의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도록 하였다.⁶⁴⁾ ‘당분간’이라는 표현을 쓰기는 했지만 수 년 전부터 제기되었던 군산의 영사관급 승격은 결과적으로 이뤄지지 못했다. 통감부 및 이사청관계가 공포되면서 “현재의 영사관원은 거의 전부 그 대로 이사청 직책에 임명”되었기 때문이다.⁶⁵⁾ 그럼에도 개항 이후 꾸준한 경

62) 보통 개항장 내 거류지에게 포고하는 포달이나 유달의 경우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대체로 고시 언어의 유형에 대해 언급한 적이 없다. 이 시기 공사관에서 영사관에 한국어 고시를 명시한 것은 일반적인 경우는 아니라고 할 수 있는데 이에 대한 의미와 의도에 대해서는 더욱 면밀한 고찰이 필요하다.

63) 『駐韓日本公使館記錄』 20, 「일러 외교 단절로 인한 한국 내 일본 인민에 대한 대응책 지시」(1904.2.7.)

64) 『駐韓日本公使館記錄』 24, 「統監府 및 理事廳 설치 칙령 실시 준비 訓令 件」(1905.11.22.) : 『駐韓日本公使館記錄』 26, 「일한신협약에 따라 통감부, 이사청, 영사관분관 직무수행에 관한 건」(1905.11.23.)

65) 『駐韓日本公使館記錄』 26, 「統監府와 理事廳自制 발표에 따른 직무시행 통달의 건」(1905.12.19.) : 『駐韓日本公使館記錄』 26, 「통감 임명에 따른 직무시행 시달」(1905.12.20.)

제발전과 인구증가 및 영사활동에 의해 안정적이고 근대적 도시로 변모한 군산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군산의 영사관 승격문제는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4. 맺음말

본고는 일본이 자국민을 보호하고 관리하기 위해 한국에 설치한 영사관 중 영사분관의 하나인 군산영사분관의 설치와 그 인적구성 그리고 영사분관 주임의 활동에 대해 살펴보았다. 군산은 조수간만의 차가 크고 조수의 흐름이 빨라 근대적 의미의 무역항으로써는 충분히 좋은 조건은 아니었다. 하지만 군산의 배후에는 충청과 전라의 곡창지대와 대규모 시장인 강경시장이 가까이 있었기 때문에 일본의 개항 요구가 일찍부터 있었다. 개항 이전에도 불법적으로 들어와 거주하던 일본인이 있을 정도로 군산의 입지는 경제적으로 일본인에게 매력적이었다. 청일전쟁 직후 일본은 더욱 강하게 군산 개항을 요청했고 1899년 5월 1일 한국정부는 해관 수입을 목적으로 군산을 개항했다. 이에 따라 일본은 1899년 5월 26일 목포영사관 군산분관을 설치하였다.

영사관 분관에 영사급으로 파견된 주임서기생은 모두 군산에 파견되기 이전에 인천영사관에서 근무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아울러 1900년 외무서기생 주임과 외무서기생 및 경부로 구성되어 있던 분관의 조직은 인구의 증가와 더불어 1902년 외무통역생이 새롭게 파견되었다. 분관원 역시 이듬해인 1903년에 3명에서 4명으로 늘었고 1905년에는 5명으로 증가할 정도로 군산은 근대적 도시로 변모해 가면서 커다란 인구증가가 이뤄졌다. 이러한 군산의 근대적 변화는 개항과 더불어 파견된 영사분관의 활동에 힘입은 바 크다. 그들이 수행한 개항장의 인프라 구축이 개항장 발전의 기본이 되었기 때문이다.

군산분관 주임서기생의 특징적인 활동양상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러시아의 남하와 관련해 러시아 세력이 군산의 토지를 매입함으로써 세력을 확장하려는 움직임을 포착한 영사분관은 이를 저지하기 위해 이와 관련한 정보를 예의주시함으로써 가능하면 러시아 세력보다 먼저 토지를 선점함으로써 러시아세력의 진출을 저지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일련의 일들이 감리의 사기행각일 가능성이 있고 더이상 러시아 세력의 진출이 확인되지 않았다.

둘째, 영사분관 주임은 상권이 넓고 상업상 이익이 집중되어 있던 군산 배후의 시장에서 한국정부의 훈령을 사칭해 독점적 상업행위를 불법적으로 저지

르자 이에 대해 적극 대응하였다. 독점회사의 활동양상을 파악하고 공사에게 보고해 이에 대한 철폐를 촉구했던 것이다. 이러한 정보를 접한 공사는 한국의 외무대신에게 강력하게 항의하였고 이들 독점회사가 불법임을 확인하고 철폐시키기도 하였다.

셋째, 한국인의 무장집단에 대한 경계심을 갖고 이들에 대한 정보를 수집해 보고하는 한편 거류민의 안정을 힘썼다. 개항장 내 구획된 거류지 내의 일본인을 보호하는 것은 영사의 기본적인 활동이다. 군산의 분관주임 역시 이를 위해 적극 활동한 사실이 확인된다.

분관주임의 활동을 통해 군산은 점차 거류일본인의 수가 증가했을 뿐만 아니라 한국인의 유입도 활발하게 이뤄졌다. 이러한 현상으로 인해 군산은 근대적 도시로 변화·발전할 수 있었다. 이는 개항한 지 얼마지 않은 1903년 군산영사분관의 승격 주장이 제기되면서 알 수 있다. 영사분관 주임의 정보와 요청에 의해 군산을 영사분관보다 격이 높은 영사관으로 승격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던 것이다. 군산분관은 을사늑약에 의해 한국의 외교권이 박탈되면서 폐쇄되었으므로 영사관으로 승격되지는 못했다.

이처럼 군산은 영사관으로 승격이 거론될 정도로 성장·발전하였으며 이는 영사분관 주임의 다양한 활동이 뒷받침되었기 때문이다. 영사분관 주임은 거류민의 안정적 거주와 활동을 뒷받침하는 핵심권력이었으며 일제의 한국침투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존재였음이 확인된다. 단순히 거류·거주 인구의 증가만으로 도시의 성장과 발전을 짐작하기 보다는 거류일본인의 안정적 활동이 가능하게 만들었던 영사의 존재에 더욱 주목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국사편찬위원회 편, 『주한일본공사관기록』, 국사편찬위원회, 1986-1998.
- 金容九 編, 『韓日外交未刊極秘史料叢書』, 亞細亞文化社, 1995-1996.
- 金正明 編, 『日韓外交資料集成』, 巖南堂書店, 1963.
- 日本外務省編, 『日本外交文書』, 日本國際聯合協會, 1936.
- 林權助, 『わが七十年を語る』, 第一書房, 1935.
- 『各國駐在帝國領事館分館主任更迭雜件 韓國之部』(외교사료관 문서 6.1.5.25-2)
- 『各國駐在帝國領事任免雜件』(외교사료관 문서 6.1.5.6-20, 22, 24, 41, 42, 44)
- 『群山府史』·『群山開港史』·『外務省年鑑』·『職務進退』·『通商彙編』·『通商報告』·『官報』·『通商彙纂』
- 박준형, 「청일전쟁 이후 일본인의 평양진출과 평양성 내에서의 ‘잡거’ -일본인 신시가의 형성과정을 중심으로-」, 『비교한국학』 23-3, 2015, 23-56쪽.
- 손정목, 「군산 및 성진의 개항 :청, 일 전쟁 이후의 도시의 변화(2)」, 『도시문제』 11, 1976, 64-83쪽.
- 손정목, 『한국 개항기 도시변화과정연구』, 일지사, 1984.
- 손정숙, 「주한 미국 임시대리공사 포크 연구(1884~1887)」, 『한국근현대사연구』 31 2004, 7-49쪽.
- 손정숙, 「주한 미국공사 알렌(H. N. Allen)의 외교활동(1897~1905)」, 『이화사학연구』 31, 2004, 123-147쪽.
- 송석기, 「개항도시 목포와 군산의 구도심 공간 형성과정 비교」, 『대한건축학회 연합논문집』 10-2, 2008, 149-158쪽.
- 송석기, 「근대기 군산의 도시 공간 형성」, 『한국건축역사학회 학술발표대회논문집』 2011-11, 2011.
- 이성호, 「식민지 근대도시의 형성과 공간 분화 - 군산시의 사례-」, 『쌀삶문명연구』 1, 2008, 182-201쪽.
- 이은자, 「清末 駐韓 中國 公館의 조직과 그 위상」, 『중국근현대사연구』 51, 2011, 23-54쪽.
- 이정욱, 「제국 일본의 식민지 도시 건설과 전통 사회의 변화」, 『일본연구』 24, 2015, 367-391쪽.
- 장동하, 「초대 주한 프랑스공사의 외교정책과 한국 천주교회」, 『가톨릭신학과

사상』 39, 2002, 99-136쪽.

최보영, 『개항 초기(1876~1880) 釜山駐在 日本管理官의 파견·활동과 그 특징』, 『동국사학』 57, 2014, 467-508쪽.

최보영, 『개항기(1876~1906) 駐韓日本領事の 활동과 한국인식』, 동국대학교 박사논문, 2018.

최보영, 『개항기(1880~1906) 釜山駐在 日本領事の 파견과 활동』, 『한국근현대사연구』 81, 2017, 7-43쪽.

최보영, 『개항기(1902~1906) 울릉도주재 일본영사관 경찰주재소의 설치와 한국의 대응』, 『한국근현대사연구』 86, 2018, 97-122쪽.

한철호, 『한국근대 주일한국공사의 파견과 활동』, 푸른역사, 2010.

현광호, 『대한제국 초기 주한일본공사의 활동』, 『이화사학연구』 33, 2006, 213-230쪽.

<Abstract>

Installation of Japanese Consulate in Gunsan and activities by Chief Secretary during the port opening period (from 1899 to 1906)

Choi, BoYoung*

This study is to find out the installation of consulate branch in Gunsan, which was one of the consulates which Japan installed in Korea, its personnel composition and the activities of the chief secretary for the consulate branch. On May 1, 1899, Korean government opened the Gunsan port on its own rather than by the treaty. Subsequently, Japan installed its Gunsan consulate branch under Mokpo Consulate on May 26, 1899. Gunsan was very attractive to Japanese as a lot of Japanese who surreptitiously in filtrated into Korea lived there.

The modern changes in Gunsan were achieved by the construction of infrastructure for the newly opened port made by the chief secretary dispatched to the consulate branch. The Gunsan consulate branch performed the following activities. First, the consulate branch found out that Russia tried to purchase the land in Gunsan to expand its influence in Korea. To deter Russian influence, Japan tried to preemptively purchase the land earlier than Russian government to prevent Russia from expanding its influence in Korea. Second, the chief secretary of consulate branch took proper actions against the exclusive commercial behaviors performed by any groups under the fraudulent excuse that they follow the Korean government's instruction in Gunsan where the commercial area was broad and the commercial profit was concentrated. Third, it was wary of the Korea's armed groups and collected the information about them and made effort to help the Japanese residents to have stable life there.

Due to these activities of chief secretary in the consulate branch, there was the increase in the number of Japanese residents as well as inflow of Korean into Gunsan. This kind of phenomenon converted Gunsan into the modern city. The chief secretary in the Japanese consulate branch was the core power supporting the Japanese resident's stable living and activities in the area and is found to have played the most critical role in Japanese imperialism's infiltration into Korea.

* Ph.D. HK research professor, Institue of Japanese Studies HK+ Project Research Center

So, the focus shall be made on the existence of consul who enabled the chief secretary to act like that rather than focusing only the city's growth and development made by the increase in the number of Japanese residents in the area.

Key Words : Gunsan, Gunsan consulate branch, Consul, Asayama Kenjo, Yokota Saburo, Police for consulate, Residential area for Japanese